



법무부,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 등 47명에게 정부포상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 장관과 김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박미화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는 13년간 공식·비공식적으로 매년 300만~5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센터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숙소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함께 살며, 사랑하며, 믿음 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을 구축해 군산·익산 지역 센터의 조직 및 활성화와 피해자에 대한 창의적인 맞춤형 지원, 공동네트워킹의 실질적 활동, 다양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온 김원요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대전 관내 8개 대형 종합병원 및 소속 의료지원위원 병·의원 등 총 19개 병·의원과 범죄피해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하는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큰 공헌을 한 정성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35명과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5개 단체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센터는 범죄 발생 직후 상담이나 응급진료·보호시설 안내, 장례절차 지원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또 신변보호나 수사기관·법정 동행, 법정모니터링 등 형사절차를 지원하고, 긴급생계비나 학자금,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등도 해주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외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센터 임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법무부가 2008년 11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해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을 채택하며 시작했다.